

##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Monitoring and Evaluation 2005

Summary in Korean

### 2005 년도 OECD 회원국 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점검 보고서

국어 개요

#### 총괄요약

90년대 후기 이후, OECD 국가 전체의 생산자에 대한 지지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지지수준은 1986-88년 총농가수취액의 37% 수준에서 2002-2004년 30%로 감축됐으나 이 수준은 7년 전 1995-97년에 이미 처음으로 이뤄졌었다. 지지수준의 연간 변동은 대외무역가격 추이가 국내시장에 전달되는 것을 제한토록 수립해 낸 정책방안을 주로 반영한다. 정책개혁은 생산자 지지의 제공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며, 생산과 연계된 지지형태에서의 전면 탈피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탈피는 향후 몇 해간 계속 유지될 것이 분명하나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연계 지지방안은 여전히 생산자 지지조치의 주조를 이루며, 산출부문 장려, 무역 왜곡 및 농업품목의 세계가격 인하를 야기시키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개시된 개혁에 대체로 무반응이었던 품목 부분도 다소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핍 현상을 다루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생산연계 지지형태에서의 탈피 조짐에도 불구하고 명료히 정의된 목표와 수혜자 대상의 목표지향적 정책수립을 향한 움직임은 매우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책방안이 집행 내내 투명성을 유지하고, 특정 결과 초래에 들어맞게 고안되며, 변하는 우선순위에 대응할 만큼 유연해지도록 더 많은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

*OECD 농업 추이는 비록 국가마다 대폭의 편차를 보이거나 여전히 높은 지지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

2004 년 OECD 국가 전체의 생산자에 대한 지지가치는 미달러로 2 조 790 억, 또는 2 조 260 억 유로로 추산된다. %PSE 측정시, 생산자 지지규모는 총농가수취액의 30% 수준으로 2003 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연구, 인프라, 검사, 유통, 홍보 등을 비롯한 농업의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지를 포함한 농업부문의 총지지규모는 2004 년도 OECD GDP 대비 1.2%의 수준이었다.

OECD 국 가운데 2002-04 년 생산자에 대한 지지가 총농가수취액의 5% 이하 수준으로 집계된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였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의 국가평균은 약 20% , 터키는 약 25% 정도였다. 유럽연합의 지지수준<sup>1</sup>은 34%로 OECD 국가 평균인 30%를 웃돌았다. 일본, 한국의 생산자에 대한 지지 평균은 대략 60%였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는 70% 정도였다.

1986-88 년 이후로 생산자 지지수준은 대다수국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노르웨이는 동수준을 유지한 반면 터키 지지수준은 확장세를 보였다. 생산자 지지수준이 가장 대폭 감축세를 보인 국가는 캐나다였고 멕시코(1991-93 년 후)와 뉴질랜드도 현저한 감축세를 보인 국가에 속한다. 지지수준이 높은 국가 중 최고의 감소율을 낸 국가는 스위스였다. 한편 OECD 농업의 총지원규모는 1986-88 년도 GDP 의 2.3% 수준에서 2002-04 년도 GDP 의 1.2%로 축소됐다. 이는 터키 외 모든 OECD 국에 동일한 추세이며, 터키 경우 농업지지 총규모의 GDP 대비 비중이 확대되어 GDP 수준과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

*생산자 지지의 제공방식을 변화토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일부 부문의 개혁은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

---

생산, 무역을 가장 왜곡시키는 - 산출 및 투입에 연계된 - 지지유형은 그 비중이 축소되어 1986-88 년 생산자 지지규모의 91%에서 2002-04 년 74%로 하락하였다. 산출량에 연계된 지지조치의 감소 추이는 국내산지가격과 수입가격간의 격차 감축세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1986-88 년간 OECD 국 전체의 국내산지가격 평균은 수입가격보다 60% 더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2-04 년 이 차이는 30%로 하락되었다. 이 격차가 최대폭으로 감축된 국가는 스위스였고 EU 와 노르웨이 경우 지지수준이 OECD 국가 평균을 웃돈 형세였다. 하지만, 감축의 대부분이 90 년대 후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동 유형 지지의 감축현상은 동시에 경지면적이나 가축 수, 또는 과거에 부여된 자격기준에 기초한 보조금직불의 증대를 수반케 되면서 총농가수취액에 제한적 영향만을 미쳤을 뿐이며 몇 직불제는 이행확보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1. 2004 년부터, EU 의 25 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추정치가 측정된다. EU 국가 중 OECD 비회원국(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베니아)은 EU25 지지 추정치 측정에는 관련되나 OECD 총가치 측정에서는 제외된다.

1986-88 년과 2002-04 년 사이 모든 국가에서 품목별 지지수준 격차가 감축되었으며 EU, 일본, 한국이 최소폭 감축을 이룬 반면 최대폭 감축은 캐나다, 스위스에서 기록되었다. 지지수준의 최대폭 감축과 지지조치 구성면의 제고는 양고기와 (쌀 외)곡물 부문에서 드러났다. 설탕, 쌀, 우유는 여전히 최고 강도의 지지 대상 품목으로 남아 있다.

---

*EU 확대는 신규 회원국과 기존 회원국 양자에 의의 깊은 과정이었다.*

---

2004 년 5 월 1 일,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OECD 4 개국을 포함한 신규회원 10 개국이 EU 에 합류했다. EU 사전 가입의 조약 결과로 EU25 국간 교역흐름은 이미 확대된 상태였고 이런 추세는 가입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10 개 신규회원국이 비 EU25 국에서 상당량 수입하게 되는 품목은 곡물부문에 한한다. EU 신규국은 유럽연합 가입과정을 거치면서 농업 부문의 생산자 및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지수준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게 되었다. 물론 EU 신규회원국의 생산자 지지수준은 증대하는 추세이나 EU15 에 비해 여전히 처진 수준이다. EU 확대는 결론적으로 유럽연합의 생산자에 대한 지지수준을 1 포인트로 감축시켰다는 판단이다.

---

*EU 단일직불제 single payment scheme 의 집행 방식에 관한 결정이 확립되었다.*

---

2003 년도 CAP 개혁의 결과 일부로써, 대다수 EU15 국이 단일직불제 집행을 2005 년에 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국가들은 2006 년에 개시하기로 했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영국은 단일직불제의 연계차단 조항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이고, 프랑스는 이 활용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앞으로 대다수국이 과거의 농가단위 자격부여기준을 토대로 단일직불제를 적용시킬 것인데 반해 덴마크,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영국은 과거의 농가단위 직불제와 지역단위 직불제, 양방식을 조합하여 사용할 조짐이다. 2004 년 몰타, 슬로베니아 외 신규회원국들은 경지면적기준의 단일직불제(SAPS) 실시에 착수하여 모든 농지에 일정금액 (1ha 당 8 개국 전체 평균치인 48 유로)을 제공했으며 10 개 신규국 모두가 'top-up' 직불제를 사용했다. 그 결과, 사이프러스, 몰타, 슬로베니아 외 여타 신규회원국들은 농가소득의 증대를 이루게 되었다. 나아가 신규회원국은 SAPS 의 과도기 종료와 함께 지역방식에 기초한 단일직불제 실시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

*지지 프로그램은 2004 년에 다시 한번 현저하게 진전되었다.*

---

미국 곡식의 가격수준 미달로 인해 유통관련 대출과 경기변동역행 목적의 직불제 프로그램에 기초한 지원 제공이 현저하게 확장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유럽연합은 올리브유, 홉 열매, 목화, 담배와 관련하여 2006 년부터 (홉 열매는 2005 년부터) 기존의 상품에 연계된 직불제를 단일직불제에 점진적으로 통합할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의 농가소득안정 프로그램은 소득지지조치를 일부 대체하게 되었고, 보험프로그램 도입은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에까지 확산되어졌다. 고가 연료의 영향을 상쇄토록 조세 감소나 보조금 지불을 실시한 국가도 다소 있었다. 아울러 기후 재난에 따른 긴급구제지불은 다수국이 활용하였다.

스위스 AP 2004-07 프로그램의 중요 구성요소의 하나가 낙농품 쿼터의 점진적 철폐 사항이다. 미국은 2005 년부터 담배 쿼터 철폐를 실시하여 10 년 단위 쿼터매입 지불제로 대체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쌀 생산의 조정체제에 더 많은 유연성이 확립되면서 현재 정부 구매량은 정해진 가격보다는 원활한 가격에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는 우유 쿼터 측면에 민간교역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왔다.

---

*농업환경 agri-environmental 정책 및  
식량안전정책은 여전히 개발 사안으로  
남아 있다.*

---

호주, 캐나다, 멕시코, 미국은 물 배분 그리고/또는 사용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방안을 강구해 왔다. 노르웨이는 농업환경 지불제의 기본틀을 개발하여 동제도 조정 및 대상자 선정작업의 제고를 모색했다. 보조금 지불제에 수반된 환경관련 상호이행확보요건은 이미 EU 에서 의무 사항이 되었으며, 일본에까지 도입된 실정이다. 덴마크, 노르웨이는 농업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조세부담을 증대시켰다. 나아가 지리적 표시제 실시를 유전자조작농산물에까지 적용시켰거나 국내의 식품규제와 행정상 구조조정을 개시했던 국가도 더러 있었다.

---

*무역협정과 WTO 농업패널분쟁은  
개혁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004 년, 거의 모든 OECD 국이 양자간 또는 역내국가간의 무역협정 체결이나, 당해 협정의 집행 착수에 가담한 경우였다. 통상 이런 협정은 농업부문의 구성요소한 가치를 포함시키는데 민감 품목은 수시로 무역자유화 이행과정에서 면제 대상이 된다. 2003 년 9 월 교착상태였던 무역협상 관련 도하개발아젠다 (DDA) 라운드는 2004 년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농업의 기본틀 마련작업에서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다수의 중요 세부사항이 협상 대상으로 남아 있다. 양자간/지역협정은 정책적 조정을 일부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인 반면 농정개혁 과정에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자간 차원의 진전확보가 더욱 긴요한 시점이다.

DDA 체결 지연이 어느 정도 원인이 되어 농업 관련 WTO 패널분쟁 건이 증대 추이를 보이게 되었다. 그런데 분쟁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양대국이 원고자 입장에 있었던 반면 피고자 입장은 거의 항상 OECD 회원국만을 관련시켰다. 패널 영역은 국내지불, 수출보조금, 시장접근체제, 국영무역기관, 식물위생 관련 요건사항 등의 쟁점사안을 광범위하게 망라하였다. 따라서 패널재판 결과는 국내정책개혁은 물론 현재 협상 중인 다자간 공약사항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 OECD 2005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개요는 영어와 불어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원본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OECD 출판물과 개요는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Fax: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